"'위험의 외주화 금지법'마련 절실"

정동영 의원, STX조선해양 폭발 관련 "중대재해 희생자 대부분은 다단계 하청과 비정규 노동자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 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운반선에서 폭발사고에 대해 "기업살인법' 제정과 산 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 금 지법'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한다고 주 자해다

이 사고는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운빈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2m 깊이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충격으로 30~50대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일에도 거제시 사등면 삼성중 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800급 골리앗 크레인과 32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하는 사고 발생하여 노동자 6명 사망하고 25명 부상한 바 있다.

두 사고 모두 휴일,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공통점(STX사고 사망자 4명, 거제조선소 사고 사상자 31명 전원 하청업체 소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우리 나라 근로자 10만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5배 가 까이 많다"며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 재사고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다.

정동영 의원은 "중대재해 희생자 대부분은 다단계 하청과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전 산업으로 확산돼 있는 '위험의 외주화' 를 막지 못하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국회 사수 2017 국회 을지연습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 17일 의결한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후 사흘 민에 발생해 현 정부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 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만 한 일이지만, 다단계 하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숨 진 노동자의 숫자는 사내하청이 0.39명인 데 반해, 원청은 0.05명으로 사내하청이 8 배 높게 나타났다. 위험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작심하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오늘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방송 토론을 마치고 사건 현장에 내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18일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새만금에서 열려 기쁘다"고말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져용지에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168개국 청소년 5만여명이 참가할 잼버리대회에 주인없는 잼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도내 각급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문했다.

이는 지난 3월,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도 정질문을 통해 주장된 바 있다. 학교 스카 우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 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청소년단 체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시적으로 스카우트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부여 등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의 '2016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업무처리 요령'을

최인정, "학교 스카우트 활동 활성화 해야"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제도 부활로 활성화 유도 필요

살펴보면, 승진가산점 부여에 청소년단체 지도 실적 시간 인정은 교외활동에서 단 일 활동으로는 최대 56시간까지만 인정하 고, 교내활동은 3가지 이상 30시간을 반드 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평일 교내외활동이 금지됐다.

이렇듯 지도교사가 총 지도시간 100시간 (교내활동 30시간 이상, 교외활동 70시간 이상) 이상 확보해야 승진가산점을 부여 받는데 청소년단체 지침으로는 가산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도내에는 학생 총 4,479명, 지도교사 331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한 학교당 청소년단체별 기입학생수가 10명~30명일 경우 1명, 31명~60명은 2명, 61명 이상은 3명 등 지도교사가 가산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승진가산점 부여대상 지도교사에게 연평정점 0.05점과 상한점 0.5점을 부여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월 0.025점, 상한점 0.2점으로 하항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7년 말까지 취득한 점수만 인정돼 그만큼 지도교사의 매리트 가 사라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연간 100시간 이상 단원을 지도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2회 실적을 인정받은 교사로 3년차에 청소년 단체활 동 지도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교사에게 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도내 한국스키우트연맹과 걸스키우 트연맹 각각 155명, 176명(총 331명)의 교 사 중 48명, 23명(총 71명)만 승진가산점 을 받고 있어 전체 지도교사의 20%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급 학교 스카웃 활성화를 위해서 는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인 데, 교사들에게 아무런 유인책 없이 지도 교사 활동을 요구하는 것.

최인정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에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 미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경제 활력 방안으로 인근지 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이 부안1호 방조제 지역이지만, 인근 김제와 고창, 군 산 등 인근지역 자원을 함께 활용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울리, 잽버리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뿐만 아니라 공항, 철도, 도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역서해다.

최 의원은 "잼버리대회 유치로 1,100억원 의 경제효과와 함께 전북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800억원에 부가가치 효과가 300억 원에 달하고 1,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측되 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 사가 임용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들이 맡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53·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일반직 고위사업은 가능급으로 임용했다고 21 이 바려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 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를 시작으로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이 실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각종 정부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해석 등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으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실·국·본부 장 7개 직위 중 검사가 맡았던 직위는 6개에서 3개로 줄어 들 전망이다. /뉴시스

文대통령 "살충제 계란으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축산환경 개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팀(TF) 마련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 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랑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또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그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 구제역 AI 발병을 줄이는 근본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에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 개편해야겠다"면서 "대응 메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